

유엔총회 화두는 ‘전쟁 중단’

각국 정상 러시아 침공 규탄…佛 “제국주의·식민시대로 복귀” 獨 “글로벌 질서에 재앙”…북·동유럽도 “정당성 없는 불법 전쟁”

20일(현지시간) 막을 올린 제77차 유엔총회 일반회의의 최대 화두는 우크라이나 사태였다.

세계 각국의 정상급 인사들이 차례로 연설하는 일반회의에서 주요 발언자들은 러시아의 침공을 규탄하면서 전쟁 중단과 외교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촉구했다.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과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에 직면한 유럽 국가들이 주로 목소리를 높였으나, 국가별로 미묘한 온도차도 감지됐다.

서유럽 주요국들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겨냥해 ‘제국주의’라는 비판을 쏟아냈다.

에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날 연설을 통해 “우리가 2월24일(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시작일)부터 목격한 것은 제국주의와 식민 시대의 복귀”라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

시아는 침략과 영토 병합 행위를 통해 우리의 집단 안보를 깨뜨렸다”고 비판했다.

첫 유엔 일반회의 연설에 나선 올라프 솔츠 독일 총리도 “제국주의의 귀환은 유럽뿐 아니라 글로벌 평화 질서 전체에 대한 재앙”이라며 러시아를 겨냥했다.

솔츠 총리는 “푸틴 대통령이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전쟁과 제국주의적 야망을 포기해야 할 것”이라며 “그는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자신의 나라까지 파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댄 폴란드의 안제이 두다 대통령은 “오늘의 희생자는 우크라이나지만, 러시아 제국주의가 성공한다면 내일은 세계 어떤 나라라도 희생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러시아발(發) 안보 위기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을 추진하는 사울리 니니스퇴

핀란드 대통령은 “국제사회는 러시아의 잔혹하고 정당하지 않은 침공을 용납하거나 정상적인 일로 받아들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슬로바키아 등 동유럽 국가의 대통령들도 “정당한 이유 없는 불법적인 전쟁”이라고 비난하며 평화적 해결과 철군을 요구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유엔 헌장의 철학과 원칙을 짓밟는 행위로 결코 용인해서는 안 된다”며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행위를 근거로 안보리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일본은 독일 등과 함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제3세계 국가들은 대체로 서방에 비해 중립적인 태도를 보였다.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은 “제재 채택이 분쟁 해결을 위한 최선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지금의 상황은 모두를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에서 멀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를 더러운 에너지원으로 돌아서게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美·加 군함 대만해협 항행에 中 반발

바이든 “중국이 대만 침공시 방어” 발언 이틀만…中 “주권 수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군사적으로 개입하겠다고 발언한 지 이틀 만에 미국과 캐나다 군함이 대만해협을 항해했다고 CNN방송이 보도했다.

미 해군 대변인 마크 램퍼드 대위는 알리 버크급 유도미사일 구축함 히긴스 호가 20일(현지시간) 캐나다 왕립해군의 호위함 밴쿠버와 함께 대만해협을 정례적으로 통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두 군함은) 특정 연안국의 영해에서 벗어난 해협의 통로를 지나갔다”며 “이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에 대한 미국과 우리 동맹, 파트너의 헌신을 나타낸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8일에도 미 해군 유도미사일 순양함 엔티탐과 첼슬러스빌이 대만해협을 지나갔다. 미국과 캐나다 군함이 동시에 항행한 건 약 11개월 만이다.

미국 당국이 이번 일을 ‘정례 항행’이라고 표현하긴 했지만 최근 바이든 대통령이 대만이 침공하면 미국이 군사 개입에 나서겠다고 발언한 이후에 이뤄진 것이라 주목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18일 방영된 미국 CBS의 심층 인터뷰 프로그램인 ‘60분’(60 Minutes)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 때 대만을 방어할 것이라는 물음에 “사실, 전례 없는 공격이 있다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와 달리 미군 부대, 병력이 중국의 침공 때 방어에 나서지는 것이냐고 구체적으로 묻는 후속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했다.

대만해협은 중국과 대만 사이의 동중국해와 남중국해를 연결하는 해협으로 국제수역인지 해석을 두고 미국과 중국의 입장이 대립한다.

중국은 대만이 자국 영토에 속한다고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대만해협이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속한다고 주장하며 이에 따라 외국 군함의 활동이 제한된다는 입장을 견지한다.

그러나 미국은 대만해협에서 중국의 영해를 제외한 해역은 국제수역으로 항행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군용기와 군함을 지속해서 파견하고 있다. 중국을 견제하고 대만을 수호하겠다는 의지 일환이다.

/연합뉴스



러 “군인 모집합니다” 20일(현지시간) 러시아 제2 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 거리에 계약직 군 복무를 홍보하는 모병 광고판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아베 국장 안돼” 日 시민 분신

70대 남성 병원서 치료중…당국, 장례 7년 앞 여론 추이 촉각

일본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 국장(國葬)에 반대하는 시민이 분신을 시도했다.

국장에 대한 비판이 고조한 가운데 장례를 일주일도 남기지 않고 벌어진 사건이 현지 여론과 정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1일 오전 일본 도쿄도 지요다구 일본 총리관저 인근 도로에서 한 남성이 “국장 반대”라고 말하고 자신의 몸에 불을 붙였다고 민영방송 TV아사히 등이 보도했다.

이 남성이 불길에 휩싸여 있다는 신고가 오전 6시 50분경 경찰에 접수됐다.

그는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근처에 있던 경찰관 1~2명이 불을 끄는 과정에서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서는 ‘나 개인은 국장에 단호하게 반대한다’는 내용이 적힌 메모가 발견됐다.

병원에서 의식을 회복한 남성은 “스스로 기름을 끼얹고 불을 붙였다”고 진술했으며 자신의 연령이 70대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 남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한 것으로 보고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연합뉴스

“사고 위험” vs “생계 위협”

하노이 관광명소 ‘기차길 카페’ 폐쇄…인근 상인들, 철회 탄원

베트남 수도 하노이시가 관광 명소인 ‘기차길’ 주변 커피숍들을 폐쇄하자 지역 주민들이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21일 현지 매체인 VN익스프레스에 따르면 하노이 중심부인 호안끼엠의 기차길 주변 주민들은 당국에 이같은 내용을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탄원서를 통해 “기차길 거리가 유명 관광지 명성을 유지하고 주민들이 생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달라”면서 이같이 요청했다.

지금까지 기차길 주변에서는 인근 주민 30여 세대가 커피숍을 운영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해당 업소들이 안전 수칙을 위반했고 사고 발생 위험이 있어서 커피숍 폐쇄는 불가

피하다는 게 당국의 입장이다.

이에 업주들은 그동안 열차가 진입할 때 고객들에게 조심하라고 경고하는 등 안전 수칙을 충실히 이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행객들의 안전 수칙 준수 서약을 비롯해 안전요원 배치 확대, 사진 촬영 장소 지정 등의 보완책을 마련하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부연했다.

호안끼엠 호수 주변 구시가지에 위치한 기차길은 선로의 양 옆에 가옥을 비롯해 커피숍 등 상점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이색적인 광경 때문에 외국인 관광객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있는 사진 촬영 장소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러, 국제 비판 ‘소귀에 경읽기’

점령지 4곳서 합병 주민투표 강행 찬성 96.6%…미·유럽 “헌법 위배” 2014년 크림반도 강제합병 소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점령지 4곳에서 합병 주민투표를 일제히 추진하면서, 2014년 크림반도 강제 합병 선례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우크라이나, 미국·유럽 등의 맹비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일사천리로 주민투표를 추진하는 러

시아는 현재 모습이 8년 전 크림반도 합병 때와 거의 똑같다는 분석이 나온다.

2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러시아는 지난 2014년에도 크림반도에서 러시아 합병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를 진행했다.

투표 결과는 압도적인 찬성(96.6%)이었다. 크림반도에는 친러시아 성향 주민 비율이 높아 이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었다.

그러나 당시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미국, 유럽 국가들은 투표 결과를 절대 인정할 수 없다고 맞섰다. 투표 자체가 우크라이나 헌법에 위배돼 아

무런 가치가 없다는 주장이었다. 우크라이나 헌법에 따르면 영토 변경을 묻는 주민투표는 해당 지역뿐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실제로 당시 친러시아 성향인 크림반도 주민 사이에서 러시아 합병을 원하는 여론이 높았던 것이 사실이었으나, 우크라이나 전체로 따지면 합병 찬성 비율이 약 30% 수준에 그쳤다.

서방은 러시아에 고강도 제재를 부과해 응수했으나, 그 합병을 저지하지는 못했다.

이달 23~27일 합병 주민투표가 진행될 도네츠크·루한스크·자포리자·헤르손 등 4개 주에서도 과거 크림반도와 비슷한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고 NYT는 전망했다.

/연합뉴스

“데크의 세대교체!”



품질보증
품질인증
Q-Mark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항매산 전망대



안성 죽산한미당



부여사비 창작지구

기존데크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프론티어벤처 KIBO 01509001
휴먼이엔티주식회사

문의 전화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6(오목리9)